

‘2025 대선 공약’ 기업의 대응 방향

2025.05.23

총론

산업, 성장, 밸류업

노동정책(인사노무)

공정거래, 상생, 온라인플랫폼, AI, 개인정보

중대재해·산업안전

에너지·환경

제약바이오

금융정책, 가상자산·블록체인

조세 및 재정정책

국정 운영(국회, 언론 등)

경제부처 조직개편

사법기관 개혁

국제 통상환경 대응

bkl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정치적 격변 속 더욱 중요해진 기업의 선제적 대응

2025 년 6 월 3 일 치러지는 제 21 대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3 자 대결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호 1 번과 2 번인 주요 정당 후보 두 명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가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정부의 정책 실행과 관련 입법이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기업의 대응 속도도 빨라져야 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여소야대의 국회로 인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 정부 출범은 행정부-입법부 관계에 있어 지금까지와 다른 변화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정치적 대변동의 국면에서 기업들은 향후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 태세를 갖추고 대응하는 것과 상황이 닥친 다음에 대응하는 것은 그 속도는 물론 대응의 수준과 질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주요 정당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후보 등록과 함께 '제 21 대 대통령 선거 10 대 공약'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후 선거 유세 및 정책 토론회, 공약 발표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하나 둘씩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어떤 공약이 실제로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될 것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 한층 더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다듬는 작업은 당선자가 확정된 후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준비하게 될 최초 100 일 동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고객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선거 기간의 한 복판인 현 시점에서 주요 정당 후보의 경제정책 기조를 분석하고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화되고 변화되는 양상을 어떤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차기 정부 정책 시리즈 1 호'를 기획하여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6 월 3 일 대선 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지체없이 후보 등록 이후부터 선거 기간 동안에 제시된 당선자의 세부 공약과 정견을 종합하여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에 따라 기업이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한 시리즈 2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어서 새 정부의 공식 조직(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따를 경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 가동되어 확정·발표될 국정과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세부 계획에 따라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를 정리해 시리즈 3 호를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2025 대선 공약' 기업의 대응방향」이 다가올 정책 변화에 대한 귀사의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앞으로도 날로 복잡해지는 정책규제 환경 속에서 깊이 있는 분석과 실천 가능한 해석을 바탕으로,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대선공약분석 편집위원회

우병렬 외국변호사(New York)
정규상 외국변호사(New York)
권석천 고문
김형욱 고문
최석림 변호사
정경화 변호사
경기동 변호사
안유진 변호사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구체적인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전문가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항목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I. 총론 2

II. 산업, 성장, 밸류업 9

III. 노동정책(인사노무) 15

IV. 공정거래, 상생, 온라인플랫폼, AI, 개인정보 21

V. 중대재해·산업안전 30

VI. 에너지·환경 35

VII. 제약바이오 41

VIII. 금융정책, 가상자산·블록체인 46

IX. 조세 및 재정정책 52

X. 국정 운영 (국회, 언론 등) 58

XI. 경제부처 조직개편 66

XII. 사법기관 개혁 70

XIII. 국제 통상환경 대응 79

I. 총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1. 이재명 후보의 주요 정책 기조

실용주의와 개혁·분배 정책의 균형점은?

승리의 자신감 속 중도 실용주의와 성장 지향성을 확고히 유지?

➔ 최근 총론에서 이러한 방향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구체적인 각론에 담길 세부공약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대응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선거 기간 동안 그 내용과 표현의 변화 추이와 온도차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

행정과 입법의 리더십을 토대로 개혁과 분배 지향 정책을 가속화?

➔ 노동과 복지 분야 및 대기업 규제 관련 공약은 이미 상당히 구체화되어 단기간 내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이 많다는 점을 예의 주시할 필요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 AI 3 강 도약
- '모두의 AI' 프로젝트
- Big 5 문화강국 실현
- K-방산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
- 국가첨단전략산업 대규모 집중 투자
- 글로벌 4 대 벤처강국 실현

2)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감사원 중립성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개혁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3) 가계 • 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경제 실현

- 코로나 정책자금대출 탕감
-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 먹튀·시세조종 근절

4)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 자영업자·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 노동조합법 제 2 조·제 3 조 개정
- 포괄임금제 금지
- 주 4.5 일제 도입
-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5)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극 대응

- 2030 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추진
- 2040 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 RE100 산업단지 조성
- 탈(脫)플라스틱 국가로드맵 수립

6) 기본사회 안전망 구축

- 기본사회 안전매트(주거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 정부의 조정 기반 마련
- 성장과 기본사회 정책의 동시 추구로 유연안정성 시스템 구축 추구

2. 정책 추진 관련 핵심 포인트

1) 정책 실행, 매우 속도감 있게 전개될 듯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재임시 이론에 치우친 정책보다는 시장과 국민이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매우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2) '尹 정부 거부권 행사 정책' 재추진 주목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추진하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제동이 걸렸던 법안들이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개혁 입법은 이전 정부와 달리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전국민 25 만원 지원금 정책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대부분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3) 기획재정부 등 '정부 조직 수술' 영향 주목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갠 뒤 예산 권한을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재정을 적극 활용한 정책이 구사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산업통산자원부의 경우 산업·통상·기후에너지 등 기능별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조직 개편은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3. 기업의 5 대 대응 전략

대통령선거로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은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경영의 불투명성을 낮추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5 가지 대응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것을 제언드립니다.

1) 기업 지배구조를 선제적으로 점검·개선해야 한다

상법 개정 등에 대비해 이사회 구성, 주주 권익 보호 메커니즘, 감사 기능 등 기업 지배구조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주주 중심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노동·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 보장,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 일제 도입 등 노동환경 변화에 대비한 인력 운영 계획과 생산성 향상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준비와 함께 노사관계 관리 전략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 등 탈탄소 전환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3) 첨단산업 지원책 활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 정당 후보 모두 강조하고 있는 AI 등 첨단산업 지원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계획과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정책을 자사 사업에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4) 사정기관 개편 따른 '수사 경쟁' 대비 필요하다

검찰청 분리 등 사정기관이 개편될 경우 독자적 수사권을 보유한 새로운 수사기관이 위상 제고 차원에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과 수사 경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법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공정거래, 부패방지 등 분야별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국정과제 수립 과정'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6.3 대통령 선거로 출범하는 새 정부도 인수위원회가 아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형태로 국정운영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그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업종별·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중장기 경영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노사 간 갈등이나 의정 갈등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은 물론, 상법 개정 등과 같이 사회적 이견이 있는 정책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틀을 구성하여 협의 과정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기구의 구성 및 대화 의제 설정에 대비한 업계 차원의 사전 검토와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

1. 김문수 후보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의 방향은?

'자유 주도 성장'의 목표 아래 규제 개혁은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 10 대 공약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음. 선거기간 중 얼마나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내용이 나올지 분석할 필요

야당 주도의 입법부 운영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 국가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국회의 여건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화와 타협을 위한 의지를 눈여겨볼 필요

1) 자유주도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 투자 저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
-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 주 52 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 AI 청년인재 20 만명 양성
- AI 유니콘 기업 지원
- 글로벌 최첨단 AI 융합센터 구축
- 한국형 소형원전 상용화 추진

3)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구현

- GTX 전국 5 대 광역권 확대 추진
-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
- 미래첨단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메가프리존 도입

4) 중산층 자산 증식, 기회의 나라

-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 부부간 상속세 폐지
- 현행 20%인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 각종 규제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

5)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임명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간첩법 개정

2. 정책 추진 관련 핵심 포인트

1) 야당의 입법부 장악으로 정부 주도 입법은 어려울 듯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 여전히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 후보는 보수 강경 노선을 대표해왔다는 점에서 야당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 추진에 수시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나타났던 시행령을 통한 정책 추진이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2)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치 재연 가능성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추진했던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등 입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결론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 정책 변화는 기업 경영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들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요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국정과제 수립 과정을 주시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자사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이에 맞게 조정하는 유연성이 절실한 때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내실 있는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도 고객 여러분과 함께 정과 성을 다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우병렬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 주)
T 02.3404.6990
E byongyol.woo@bkl.co.kr



권석천
고문
T 02.3404.7599
E sukchun.kwon@bkl.co.kr



김형욱
고문
T 02.3404.7350
E hyeongwoog.kim@bkl.co.kr

II. 산업, 성장, 밸류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현재까지는 '주요 공약' 형식으로 골격만 제시된 상태여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주요 공약

1) 기업 육성을 위한 직접적인 산업정책

- 축적된 잠든 자본 투자로 전환 (국민자산 2 경 3,000 조원, 기업 사내유보금 237 조원)
-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안보 이슈 등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가가 산업에 적극 개입하는 시대
- 기존 간접적 산업정책에서 나아가 기업 육성을 위한 직접적인 산업정책으로 발전
  (ㄱ) 자금: 모험자본의 적극적 조성·공급, 자본시장 육성
  (ㄴ) 판로: 혁신제품 공공구매(혁신조달), 해외시장 진출지원 및 시장확대
  (ㄷ) 인재: 부족 전문인재 확보지원, 교육혁신 및 중장기 인재 육성

2) 낮은 자본성숙도 극복

- 자본성숙도 측정수단인 GDP 대비 자본 증대량은 GDP 대비 공모펀드, 사모펀드, 회사채 등 증권 발행 규모 비중을 의미하는데 한국의 GDP 대비 자본 증대량은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감소 추세. 2018 년 한국의 GDP 대비 자본 증대량은 10.9% 였으나 2022 년엔 8.2%로 하락. 한국시장은 코리아디스카운트 박스피로 표현하듯이 외면받는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 경제 성장율에 도움
-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함
- 모태펀드 위주로 되어 있는 벤처투자를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 기업주도형벤처케피탈(CVC)를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이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끔 제도 지원
- 2022 년 100 대 기업 사내유보금이 1,000 조원을 돌파하였고 이중 10 대 기업의 유보금이 448 조임. 좀 더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용이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 검토
- 상법 등 개정을 통한 소액주주의 참여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 제공

3) 기업 성장을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 정부역할 방향: '기업가 정신이 살아 숨쉬는 혁신 국가'를 기업과 함께 달성

(ㄱ) 정치적 안정과 법질서 회복을 통해 대외 신인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고, 경제적 안정화 정책을 시행

(ㄴ)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혁신생태계 구축,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

→ 정부는 창업과 도전이 보장되는 경제환경을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업 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

< 기업성장을 위한 8 대 정책 과제 >

순번	정책 과제	내용
1	정책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 **(제도의 안정성)** 기업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 - **(정책 로드맵)** 주요 경제정책, 세제, 규제 변경 사항에 대해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예측 가능성 확대 *연금·노동 개혁, 기후위기·AI 대응 등을 위한 기업, 노동계, 시민단체, 정부 등이 사회적 대 타협을 통한 합의와 협력이 바람직 *집권 초에 국가 비전 전략(가칭: "비전 2050")을 정부-국회-기업-시민단체 등이 함께 수립하여 미래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비
2	기업 혁신을 위한 인프라 지원	- **(기업 활동 공간 확대)** 디지털·수출·해양·우주 등4대 기업 활동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 **(혁신 생태계 지원)**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 지원과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하고, 대학·연구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상용화 지원 - **(정부 구매력 활용)** 기업이 개발한 혁신 신제품과 정부의 R&D 과제 성과물을 정부가 우선 구매하여 초기 판로를 확보하고, 혁신기업에 대해 공공부문이 초기 투자 지원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육성)** 창업 지원 펀드 확대 및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경제의 다각화를 도모 -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5G, 6G 통신망, 클라우드 기술, AI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기술의 기반 확충 - **(미래 인재 육성)**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전문 인재 육성 - **(규제 완화)** 불필요한 규제 및 복잡한 행정절차를 철폐하고, 신산업 및 스타트업에 적합한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 - **(AI 정부 구축)** AI기반 정부를 통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정부의 공동 대응)** 현재의 난관 극복과 미래 문제에 대한 선도적 대응을 위한 기업-정부 간 Hot-Line을 구축
3	**대외 신뢰 및 국가 브랜드 회복**	- **(외교적 대응 강화)** 주요 교역국,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대외적으로 강조하고 신뢰를 회복 - **(국제사회와 소통 확대)** 정부의 개혁 의지, 대한민국의 안정성, 우리 기업의 혁신성을 공공·민 간 합동으로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하여 투자자와 기업의 신뢰를 회복 - **(K-브랜드 이미지 회복)** K-컬처, K-테크 등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제고 -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기업의 의존도를 분산
4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수출 확대 지원)** 미국발 관세 전쟁에 선도적 대응하고, 양자·다자 협력 강화 및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 **(해외 투자 유치)**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혜택 제공과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 - **(국제 표준화 선도)** 국제 표준화와 공동 연구 등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 참여
5	**경제 안정화**	- **(기업 자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저리 자금 지원, 투자 지원 확대, 세제 감면, 수출 보험 확대 등 - **(대외 리스크 관리)** 급격한 환율, 금리 변동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 시장 안정화 조치
6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고용 안정성의 조화**	- **(노동 유연성)** 노동 시장을 유연화하여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고용 안정성)**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기업 수요에 맞춘 전문 인력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용 안정성 강화
7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불평등 해소**	- **(사회안전망)** 기업과 국민이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소비심리를 안정시키고 내수 진작을 유도 - **(불평등 해소)** AI시대와 기후위기 도래로 위기에 처할 소외계층 등 모든 계층에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정책 마련
8	**기업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지원**	- **(사회적 책임 강조)**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공정 경쟁)** 대기업-중소기업간, 원청기업-하청기업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신뢰도 제고 - **(환경 규제)** 환경 규제와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2. 시사점 - 균형감 있는 방향성의 내면은 '지원 방안은 원론적, 규제 방안은 구체적'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은 명확하게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아래와 같이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각 기업은 이를 대비한 사업계획,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법 개정안 추진

이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상법 개정안(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및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방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등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액주주 의결권 강화로 인한 기업의 경영권 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2) 자사주 소각 및 '쪼개기 상장'의 경우 주주보호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자사주 보유한도 제한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사전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쪼개기 상장이 이뤄질 경우에는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3)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한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하여,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초저평가 기업 정리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0.2배인 회사(저평가된 기업들)는 주식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켜 주가지수를 끌어 올리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5)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 방안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 선진국 편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

현재까지는 주요 공약 형식으로 공표된 사항 외에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사 중심의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 배당소득세 폐지로 국민들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기회를 제공

  (5,000 만원까지는 배당소득을 부과하지 않고, 5,000 만원 초과분의 경우 20% 분리과세)
- 경영판단의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배임죄 처벌 면제
- 합리적인 금융시장 거버넌스 환경 구축

  (ㄱ) 상장사에 한해 주주 보호 의무 강화

  (ㄴ)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

  (ㄷ) 전문경영인의 투자나 경영판단의 합리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배임죄 처벌을 면제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 환경을 조성

2. 증시 부양을 위한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불식하기 위해 시장과 적극적 소통
- 해외투자자 대상 K-자본시장 IR 을 대통령이 직접 진행. 해외 금융사들이 국내에 들어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기대
- 박스피(박스권 코스피)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K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관련 전문가



윤성조
변호사
T 02.3404.0196
E sungjo.yun@bkl.co.kr



오명석
변호사
T 02.3404.6587
E myoungseok.oh@bkl.co.kr



안현철
변호사
T 02.3404.6541
E hyunchul.an@bkl.co.kr

III. 노동정책(인사노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민주당이 발표한 대통령선거의 주요 공약 10 개 중에는 7 번째 정책 순위로 노동정책에 관한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① 노동조합법 제 2, 3 조 개정, ②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③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④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표기준 마련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⑤ 주 4.5 일 확산·도입 등으로 2030 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감축 등이 있습니다.

1. 노동조합법 제 2, 3 조 개정(노란봉투법)

1) 주요내용

현행 노동조합법의 해석상으로는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체결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법 제2, 3조의 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개념 자체를 확대('노동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하여 원청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단체교섭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하청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되면 원청은 수많은 하청 노동조합들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되며, 노동조합법 제43조에 따른 사용자의 대체근로의 범위와 노동조합 측의 업무방해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시사점 - 실현 가능성이 높으므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할 필요

지난 정부는 노동조합법 제2, 3조 개정법안에 대하여 2차례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경영계에서는 노동조합법 제2, 3조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노동조합법 제2, 3조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의안들이 다수 존재하고, 집권 이후 다양한 변수에 대비하여 집권 1년차 대표 과제로 신속하게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며, 5월 18일의 후보토론회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판례도 있다면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므로, 향후 정책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2.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1) 주요 내용

포괄임금제는 실무상 운영되어 온 제도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한 정액급제,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정액수당제가 포함되며,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전에 약정한 것 외에는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체로 합니다.

포괄임금제와 별도로 실무상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고정OT 제도가 널리 활용됩니다. 고정OT 제도 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약정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고정OT를 지급해야 하며, 약정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했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판례에서도 고정OT 제도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법안들은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를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근로시간을 일·주·월 단위로 측정·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2) 시사점 – 입법을 둘러 싸고 논쟁이 상당할 것임

포괄임금제는 이미 대법원이 제시한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고정OT 제도는 계산을 편의를 위한 목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 등의 오남용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길이보다는 근로의 질이 중시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반하고, 업종별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며, 노사간에 근로시간 관리나 근태관리를 두고 법적 분쟁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3.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1) 주요 내용

현재 발의되어 있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안)은 그 제안이유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등장하면서 기존 법 제도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에 포함되기 어려워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근로자 보호 제도의 적용이 모호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하는 사람에 대한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와 부당해지 제한, 육아휴직과 임산부 보호,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이 있습니다.

2) 시사점 - 신속한 입법화가 추진될 것인지 주목됨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위 법안에 기반하여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노무자의 권리 보장,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공동 주최한 2025년 노동정책 토론회에서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근로자 등의 근로자의 지위가 문제되는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제도 개선에 나아가 특수고용 및 플랫폼 근로자 등에게 더 강한 권리 보호를 부여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까지 추진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4.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표기준 마련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1) 주요 내용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산업별 임금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제시한 임금분포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근속·직무·직급 등 다양한 항목의 임금 분포 자료를 공공 데이터로 공개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표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 활성화로 저임금노동자들의 기본 노동조건을 보장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고, 기본적으로 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산별 교섭의 촉진,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의 확장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시사점 - 실효성에 대한 의견 대립이 치열할 것임

이에 대하여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표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산업 차원의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기업별 지불능력이 다른 현실에서 실제 활용 가능성이 떨어져 실효성에 의문에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기업별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초기업적인 산별 교섭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기업별 교섭 관행을 산별 교섭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인지, 산별 교섭과 단체협약 효력의 확장이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5. 주 4.5 일 확산·도입 등을 통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

1) 주요 내용

민주당이 제시한 주 4.5일은 임금 삭감 없이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입니다. 2025년 노동정책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1주간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1주 40시간에서 집권 초기 3년은 1주 36시간, 이후에는 1주 3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2) 시사점 - 성급한 추진보다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엿보임

임금 삭감 없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경직된 법정 근로시간의 운영보다는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을 통해 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단계적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실시를 예고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자도 나서서 이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정책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근로시간 축소 및 주 4.5일제 법제화가 될 것을 대비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더하여 적정 임금 수준 유지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은 2025. 5.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1 대 대통령 선거 10 대 공약"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10 대 공약에 노동에 관한 공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김문수 후보가 1 순위로 꼽고 있는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공약'의 목적은 '자본, 기술, 노동 3 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하여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 실현'이고, 그 이행방법 중 하나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제시하면서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 52 시간제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과 김문수 후보의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했던 발언 등에 비추어 국민의힘의 주요 노동정책 과제, 그 시사점과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노동정책 과제[1]

1) 근로시간 유연화 등 제도개선 추진

2024년 현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특별 법안」은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 및 연구개발 근로자를 주 52시간 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조항 때문에 여야 합의가 교착상태에 있고, 김문수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K-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반도체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김문수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근로시간을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업종별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힘은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전 업종에 걸쳐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규제를 업종에 따라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퇴직 후 재고용의 단계적 도입

김문수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고,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아니라 현행법상 정년(60세)을 유지하되,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을 촉진하면서 그에 대한 지원방안 강화하는 것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정년 연장과 맞닿아 있는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및 임금체불 엄정대응 등

현 정부와 김문수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므로, 향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하는 방향의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문수 장관 시절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해소를 중요 정책 목표로 삼아왔으므로,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 되더라도 상습 체불업체 제재 강화, 노동현장 불법관행 개선 및 노사법치 확립, 중대재해 감축 추진 등과 같은 방향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1] 아래 내용은 근로시간 개선 외에는 공식 공약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2. 시사점 – 뚜렷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사회적 환경

김문수 후보의 1 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이고, 이를 위해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 신산업·신기술 성장 추진, 일자리 창출 등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노동분야에서 적극적인 규제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사업장의 기본질서를 바로잡고 산업안전을 확보하는 정책 방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법정 근로시간 축소와 주 4 일제 법제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 되더라도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난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충안으로 법정 근로시간 축소와 함께 예외적으로 업종별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으나, 여야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생·고령화·저성장 등으로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서 고령자 고용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사이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년과 연금개시 연령의 불일치에 따른 노령층 빈곤, 청년 취업의 문제, 그리고 법과 제도로 강제하기 어려운 임금체계 개편 등 여러 이해관계와 갈등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장기적·단계적 접근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노동조합법 제 2, 3 조 개정을 집권 1 년차 대표 과제로 수립하여 신속한 입법을 추진할 것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노동조합법 제 2, 3 조 개정법안에 대하여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 되면 이러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전문가



김상민
변호사
T 02.3404.7545
E sangmin.kim@bkl.co.kr



박화진
고문
T 02.3404.0648
E hwajin.park@bkl.co.kr



박은정
변호사
T 02.3404.0598
E eunjung.park@bkl.co.kr

IV. 공정거래, 상생, 온라인플랫폼, AI, 개인정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1. 공정거래·상생

1) 정책 기조 및 배경

이재명 후보는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대기업과 소상공인(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간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2) 주요 정책 내용

- 갑을 관계 규제 강화, 을의 협상력 강화

이재명 후보는 2025년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로,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등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의 협상력 강화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해 공식 등록하고, 본사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 등에게 근로자 수준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본사가 교섭 요청을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가맹사업법」 개정안(민주당 발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연계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원재료 가격, 광고비, 계약 조건 등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가능하게 하여,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플랫폼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고,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입점업체 간 차별적 수수료율 적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율 상한을 정해 고시하며,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 거래조건의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입점업체 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점주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3) 시사점 -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또는 upgrade가 요망됨

- 법·제도 리스크 증대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리점주, 가맹점주,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높여주기 위한 각종 정책들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강화되는 법·제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통제·준법경영 강화, 상생협력 문화 정착, 플랫폼 거래의 투명성 제고 등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부여에 대한 대비 필요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이 부여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점주 단체와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보다 한층 체계적이고 투명한 협상 및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점주 단체 난립 시 협의 절차 복잡화, 인력 및 비용 부담 증가, 주요 의사결정 지연, 트렌드 반영의 어려움, 분쟁 증가 등 경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는 협의 요청 대응 프로세스의 표준화, 단체협상 남용 방지장치 마련,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의 신속한 모니터링, 내부 교육 강화, 리스크 평가 및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이 요구됩니다. 특히, 단체협상권 남용 및 절차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규정 정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감독기관과의 소통 강화가 중요합니다.

- 플랫폼 기업 컴플라이언스 강화 필요

  플랫폼 기업에 중대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우선, 수수료율 상한제와 차별금지 의무가 도입될 경우, 기업은 수수료 산정 및 부과 기준의 투명성 확보와 내부 통제 프로세스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수수료율과 광고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입점업체 단체와의 협의 요청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해야 하며, 차별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데이터와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수수료 상한에 따른 수익 감소를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비용으로 전가하는 '풍선효과'가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비용구조 전반에 대한 리스크 평가와 공정거래법, 온플법 등 관련 법률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는 법률 위반 시 과징금, 시정명령 등 제재 가능성이 커지므로, 내부 교육과 준법감시 체계 강화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온라인플랫폼·AI 및 개인정보

1) 정책기조 및 배경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25년 대선에서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았습니다. "AI는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라는 선언 아래, 100조 원 규모의 투자와 규제 개혁을 통해 한국을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및 AI 인프라 확충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한 'AI 기본사회' 구현을 강조합니다. 특히 생성형 AI(챗GPT 등)와 반도체 기술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금융·의료 등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주요 정책 내용

- AI 100조 원 투자 및 미래인재 양성

2030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100조원을 AI 분야에 투자해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GPU 5만 개를 확보하여 초대규모 AI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전용 칩(GPU 대비 에너지 효율 50% 향상, 비용 30% 절감) 개발 및 NPU(신경망처리장치) 성능 검증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에 1.4조 원 투자할 예정입니다. 고성능 AI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이 인프라를 활용한 실무형 인재 양성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 'AI 모두의 AI' 프로젝트

한국형 챗GPT 등 생성형 AI를 개발해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 AI 활용의 문턱을 낮추고 데이터 축적을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조업용 예지보전AI(Predictive Maintenance AI), 금융권 사기 탐지 알고리즘 등 분야별 특화 모델 개발을 지원하여 AI 기반의 생산성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유도합니다.

- 공공 데이터 민간 개방

공공 데이터와 AI 인프라를 민간에 적극 개방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혁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료·교통·금융 분야 공공 데이터를 집적해 민간에 개방하고, AI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AI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으로 개발 여건을 보장합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 시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AI의 기본인 데이터 학습을 위하여 AI분야에 대한 국제 협력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 및 데이터 보호

온라인플랫폼의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 배달문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만, 2021~2024년 논의에서 등장했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구체 조항(징벌적 손해배상, 분쟁조정기구, 표준계약서 등)"이나 "경기도 조례의 전국 확대" 등은 2025년 대선공약집 및 공식 발표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AI 규제 합리화 및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이재명 후보는 기업이 불합리한 AI규제로 기술 개발 및 투자 유치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온전히 기술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AI 규제를 합리화하여 AI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법을 정비하고, 특허법, 출입국 관리법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될 AI 특구도 확대해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국방 AI, 스마트 데이터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산업 등 첨단 분야 R&D에 대한 국가투자를 확대하고, AI 융복합 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3) 시사점 - 인프라와 데이터 등 활용 전략과 리스크 관리 등 사회적 책임 제고 방안이 동시에 필요

- AI 기술 투자 및 공공 인프라 활용 전략

  AI 인프라와 공공 데이터 개방 정책은 기술 개발의 물적·정보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AI 반도체, NPU 기반 시설 구축, 산업별 특화 AI 등은 정부의 투자 확대와 직결되며, 기술 선점 기업에게는 공동 R&D 또는 정부 과제 참여를 통한 레버리지 기회가 됩니다. 기업은 국가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내 입주·협력 전략,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술·특허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고려함으로써 선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생성형 AI 상용화 및 데이터 활용 기회의 확대와 리스크 관리

  공공 주도 '모두의 AI'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무료 제공 확대는 민간 서비스와의 경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은 기능·품질·보안 측면에서 공공 AI 모델과의 차별화 전략(B2B 특화 솔루션, 고도화된 기능 개발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개방과 민간 활용 확대는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기회가 되지만, 동시에 데이터 결합·가공 과정에서의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체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 편향성, 저작권 이슈를 사전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AI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와 계약 구조 개선 등이 요구됩니다.

- AI 활용에 따른 사회적 책임 이행

  AI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따라, 단순한 법적 준수를 넘어서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면서도,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적·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방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편향(Bias),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 등 기존에 문제제기가 되어 왔던 부분에 대하여 AI 거버넌스 체계를 내재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플랫폼 공정거래 규제 강화 가능성 대응

  온라인플랫폼 관련 규제 공약은 과거 입법 시도보다는 완화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시장지배력 남용·배달수수료·데이터 독점 문제에 대한 공정거래 조사 강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구조 투명화, 표준계약서 검토, 분쟁대응 절차 정비, 내부 준법감시 체계 고도화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조사 및 제재 리스크를 최소해야 합니다.

- 데이터 국외이전 전략 수립

  AI학습을 위한 국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다양한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준비하여 고도화된 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되 데이터 이전 및 활용 과정에서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정보보호 관점에서 안전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기술적 정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AI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국제 데이터 공동활용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국제 생태계 연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

1. 공정거래·상생

1) 정책 기조 및 배경

김문수 후보는 제1호 공약으로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울 정도로, 친기업적인 정책을 전면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자유 주도 성장' 달성,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산업·신기술 성장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를 실현하고, 생활필수품 가격안정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정책 내용

- 규제 완화, 투자 환경 조성

  김문수 후보는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며,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하여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등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하여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 반영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전기료 부담 경감 등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판로를 확대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합니다.

3) 시사점 - 일부 규제 강화 예상 분야에 대한 대비가 요망됨

김문수 후보는 친(親) 기업적인 정책,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대기업 집단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제력 집중 억제, 사익편취·부당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를 실현하고,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화 등의 정책도 내세우고 있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거래상 지위 남용, 하도급법 위반, 가맹사업법 위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규제는 강화될 수 있고, 생활필수품 가격을 올리는 담합을 집중 조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요구됩니다.

2. 온라인플랫폼·AI 및 개인정보

1) 정책기조 및 배경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025년 대선 제2호 공약으로 AI 전 주기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AI 분야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AI생태계 전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민간 중심의 투자 활성화와 AI 규제 혁신 등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과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을 참여시켜 100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하며, 국가 AI위원회를 만들고 AI정책 보좌관을 둘 계획입니다.

2) 주요 정책 내용

- AI 인재 20만 명 양성

AI인재 양성을 위해 AI대학원 및 SW중심대학의 정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대학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인건비·연구비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 부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인재의 양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AI활용 기반의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을 확산하여 AI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합니다.

- AI민관 합동펀드 100조 조성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합동펀드 100조원을 조성하고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AI 스타트업과 AI유니콘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AI핵심 기술 인프라 확보를 지원합니다.

- AI생태계 강화

  가치 있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고 차세대 AI(차세대 GPU, NPU, HBM 등) 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AI 융합센터 설립,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도 병행 추진합니다. 국내외 기업 주도로 AI 스타트업·벤처 성장 펀드를 조성합니다.

- AI관련 규제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

  국가 AI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AI규제 도입 시 대통령 직속 국가 AI위원회가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AI정책 보좌관을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를 위촉합니다. 데이터 규제를 혁파하고 학습 데이터 접근 경로 개방을 확대합니다. 규제 기준국가제를 적용하여 국내에만 있는 규제는 폐지합니다.

3) 시사점 - 다각적인 내부 규정 및 시스템 정비가 요구될 것임

- AI인재 양성 및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AI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바, 기업에서는 AI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인건비 및 연구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의 확보와 투자를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AI인력이 기업에서 AI 기술개발 및 활용을 함에 있어서 윤리기준이나 법적 책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AI생태계 조성 및 강화

  AI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하여 민관 합동펀드 100조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차세대 AI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인바, 이에 발맞추어 AI기술개발 및 활용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에 따른 데이터 활용 기회를 포착하되 데이터 결합·가공 과정에서의 법적 책임 부담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AI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와 계약 구조 개선 등이 요구됩니다.

- AI규제 혁신에 따른 거버넌스 체계 구축

  AI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혁신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기업의 AI기술 개발 및 활용에 있어서 알고리즘의 투명성, 사용자 설명 책임 강화 등 글로벌 공통의 규제 취지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에만 있는 규제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에 발맞추어 AI 관련 정책 및 내규 수립 시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대통령 직속 국가 AI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AI규제 도입 시 영향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규제기관의 동향과 규제방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데이터 국외이전 전략 수립

  학습 데이터 접근 경로 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 규제를 혁파하기로 한 입장에 발맞추어 AI학습을 위한 국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다양한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준비하여 고도화된 기술 개발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해킹 등 침해사고 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정보보호 관점에서 안전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기술적 정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AI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국제 데이터 공동활용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국제 생태계 연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김홍기
변호사
T 02.3404.0489
E hongki.kim@bkl.co.kr



강정희
변호사
T 02.3404.6480
E jeonghee.kang@bkl.co.kr



김규식
변호사
T 02.3404.0945
E kyusik.kim@bkl.co.kr



강태욱
변호사
T 02.3404.0485
E taeuk.kang@bkl.co.kr



윤주호
변호사
T 02.3404.6542
E juho.yoon@bkl.co.kr



이강혜
변호사
T 02.3404.7454
E kanghye.lee@bkl.co.kr

V. 중대재해·산업안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정책 공약을 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의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법령 체계의 변경을 전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직종 및 작업 유형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및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을 표방하여 기존의 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년간 다수 발생한 산불, 대형화재, 지하차도 침수, 이태원 참사 등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방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확보

1)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에 대한 실질적 안전보건기준 마련
-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노동안전보건청' 설립으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산업재해 예방정책 집행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투자 규모,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계획, 산재발생현황,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계획 등을 공시하는 기업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장 벌칙 도입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 안착
- 도급 위험작업 시 1 조 2 인 이상 작업 등 예방조치 의무화, 기후여건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 및 노동자 참여 등 제도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산업안전보건체계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 확대

2) 건설안전 강화

- 건설공사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에서 안전대책 강화
- 건설산업에 적정임금제 도입, 불법고용 방지, 부실시공 사망사고 예방대책 강화 등

3) 전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 실현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적용
- 산재보험급여 선 보장으로 국가책임제 실현

2. 재난 대응

1)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

- 시설물안전관리 강화
- 화재안전 장비 확대 및 최신 소방장비 도입
-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통신망 체계 및 재난현장 지휘권 강화

2) 화재 안전 장비 확대 및 최신 소방장비 도입

-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설비 전수 조사 및 보강
- 산불화재 조기 진압 위한 고정익 소방 항공기 등 최신 장비 도입
- 인명구조 로봇 및 소방작전 드론 등 최첨단 소방장비 도입 개발 보급

3) 도시침수 예방으로 인명 재산피해 발생 사전 차단

- 대심도 하류 저류시설 설치 지원 강화
- 도시침수 중점관리지역 추가지정

4)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확보와 신속제공

- 생활화학제품 등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유해성 신호등(GHS 심볼 및 경고문구) 적용으로 유해성 정보 전달 의무화
- 화학물질의 근로자 노출 위험 관련 물질평가 과정에 전문가 참여 의무화

3. 시사점 – 규제 강화가 확실시되므로 예방책과 리스크 관리 수준 제고가 절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 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위헌성 논란도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루어진 안전보건 법령 체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대상을 일반 근로자에서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하여 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나 의무사항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식 공약에 포함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 동안 이재명 후보가 표명해 온 견해에 비추어 볼 때, 광역시·도에 산업재해 관련 감독권 부여 등을 통한 예방 관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이 경우 현장과 광역자치단체 감독자 간의 소통 및 기업의 자체 점검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계속하여 높은 재해율과 사망률이 유지되는 건설산업의 경우에는 안전대책 강화와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책임 강화 등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고, 최근 몇 년간 다수 발생한 침수, 싱크홀 사고, 붕괴사고 등과 관련한 맞춤 대안, 정책 집행으로 인해 기업의 대응 노력을 위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안전보건에 대한 국민적 의식 향상으로 인해 관련 정책이 강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생각되고, 자율적 예방체계 강화 정책에 발맞춰 기업 스스로도 이에 대한 투자와 관리체계 수준을 높이는 것이 결국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은 2025. 5.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1 대 대통령 선거 10 대 공약"을 제출하였는데, 10 대 공약 중 중대재해나 산업안전에 관한 직접적인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8 호 공약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에서 최근 발생한 항공, 싱크홀 사고, 기후 자연재난 등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의 제 1 호 공약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점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후보의 고용노동부 장관 재임 시기 및 선거운동 기간 중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김문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 조항 폐지 등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자율적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장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공약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예상되는 정책

1)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 조항 폐지 등 법 개정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재임 시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하여 이미 '처벌보다 예방 위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근 대선 후보로서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행사 등에 참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고, 중소기업을

괴롭히지 못하게 고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더구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기업인들의 사법 리스크 저감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 조항 폐지 등 법 개정 방안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업의 자율적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구축

김문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노동 정책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을 비롯한 노동 관련 규제 완화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산업안전보건 체계와 관련하여서도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표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시사점 – 산업안전 분야 규제완화 추진이 예상되나 국회의 장벽을 넘지 못할 듯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고,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분야에 있어서도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강화되어 온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 조항 폐지 등 법 개정 공약은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등의 반대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입법을 통한 중대재해·산업안전 분야의 규제완화는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현재의 형사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산업안전 체계는 새 정부 하에서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더욱 노력하여 경영책임자 등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이형석
변호사
T 02.3404.0145
E hyungsuk.lee@bkl.co.krsss



최진원
변호사
T 02.3404.0944
E jinwon.choi@bkl.co.kr



김영민
공인노무사
T 02.3404.0693
E youngmin.kim@bkl.co.kr

VI. 에너지·환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 관한 정책은 문재인 정부 대비 이념보다는 효율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바, 에너지고속도로, RE100 산단 등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산업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제 2 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유지하고, 탄소중립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신재생에너지 확대

1) 배경

이재명 후보는 국제적으로 RE100 흐름이 확산되어 재생에너지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를 기피하는 추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도 안 되는 현실을 지속하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수출 주도 경제인 한국으로서는 탄소국경세 등 기후규제에 대응하지 못하면 심각한 경제 타격이 예상되므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필수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2)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통한 햇빛·바람 연금 확대, 농가태양광 설치 확대를 수단으로 합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및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3)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2030년까지 서해안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남서해안 지역에 풍부한 해상풍력 20GW 전력을 수도권 등 주요 산업지대로 신속히 송전하고, 2040년까지 한반도를 U자 형태로 잇는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여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고 동해안 해상풍력까지 연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석탄 비중을 최소화하고, 액화천연가스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 비율을 신속히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그리드 기술,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결합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고 잉여 전력을 배분하여 지역간 전력망 불균형 해소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4) RE100 산업단지 구축

전국에 RE100 산업단지, 즉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100개 이상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단지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기업들이 친환경 전력을 조달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5) '탈원전'이 아닌 '원전 활용'을 통한 에너지믹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급진적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으로 보이는바,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 추진이 예상되나 신규 대형 원전 건설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감축 목표를 현실적으로 맞추기 위해 조건부로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 둔 것으로 평가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나 핵융합 등 미래 원전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와 투자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시사점 - 전력망 확충에 적극 대응 및 석탄과 화력발전 관련 사업의 위기 요소 사전 대비 필요

신재생에너지로의 급속한 전환을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과 계통 연계가 선결 과제이므로,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전력망 관련 전략적 투자 및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 기존 산재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우므로 공약 이행 상황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다소 실용적인 접근을 보이기는 하나,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므로 석탄화력발전사업 및 연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는 선거 이후 정책 동향을 주시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기후에너지부 신설

1) 목적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시부터, 여러 부처에 분산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업무 등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전력시장 및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을 언급해 왔습니다.

2) 주요 방향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전력 수급, 석탄·석유·가스 자원 관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등)과 환경부 일부 기능(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 배출량 관리, 기후변화 적응 대책 등)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고 산업·통상 기능은 '산업통상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기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한 제안도 있는 상황이므로 추후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와 같은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할 경우,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발전원 믹스, 전력·가스 요금, 원전 및 재생에너지 정책 등)과 탄소감축 전략(2030 NDC 이행, 2050 탄소중립 추진, 기후위기 대응 대책 등)을 한꺼번에 총괄하는 부처의 출범이 예상됩니다.

3) 시사점 - 실행 가능성도 높은 편이고, 비교적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이재명 후보 당선 시 기후에너지부 출범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에너지 분야의 기술·산업 전문성과 환경 분야의 규제·협약 전문성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환경부 내 기후관련 조직보다 산업부 내 에너지 조직 규모가 훨씬 큰 점(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산하 1국 3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 산하 4국 13과 규모)에 비추어 기후정책이 후순위로 밀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예정된 제16차 천연가스 수급계획, 제4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이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 관한 공약은 윤석열 정부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에너지 정책의 경우, 발전원 중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발전 비중을 높이고 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을 추진하며 원전 수출 확대 노력을 지속하는 등 원자력발전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I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인바, 기후변화를 재난 대응으로 접근하려는 방향으로 이해됩니다.

1. AI 산업 필수인프라인 전력의 안정적 확보

1) 원전 산업발전 지속 추진

김문수 후보는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으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이행방안으로 AI 산업에 필수적인 인프라인 전력의 안정적 확보를 꼽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대형 원전 6기의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원전(SMR)의 상용화를 통해 원전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원전 비중 확대를 통하여 AI 시대 에너지 공급능력을 확충하겠다는 포석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산업용 전기료 인하

또한 김문수 후보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구현하고, 반값 전기요금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에너지 고속도로 연결 및 재생에너지 활용도 제고

김문수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전력망의 확충을 강조하면서 전국에 에너지 고속도로·국도·지방도를 정교하게 연결하여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에너지 신기술의 개발과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도 강조하고 있는바,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시사점 - 전기요금 인하 추진 외에는 윤석열 정부와 동일한 정책 방향

김문수 후보의 에너지 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와 대체로 유사하므로 급격한 변화 없이 현 정책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최근 상대적으로 급격히 인상되어 국내 제조업 경쟁력의 부담 요소로 지적되어 온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막대한 한전 적자 규모를 고려할 때 이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어 향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여 기후 재난에 선제 대응

1) 주요 내용

김문수 후보는 복합·대형화되는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전대비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예측 → 대응 → 복구"까지 전 주기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여, 국토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 등 관련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기후재난에 관한 권한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형 인프라·도시계획 정책을 강화하고, 기후재난 예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보다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시사점 - 무늬는 환경부의 확대 개편인데, 기후변화 대응 기능 강화는 감속될 수도

국민의힘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통합에 따른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산업부의 에너지 공급조직 중심으로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기후변화대응 기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전문가



이광민
변호사
T 02.3404.6452
E kwangmin.rhy@bkl.co.kr



방종식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 New Jersey 주)
T 02.3404.7588
E jongsik.bang@bkl.co.kr



권소담
변호사
T 02.3404.7651
E sodam.kweon@bkl.co.kr

VII. 제약바이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1. 지역 • 필수 • 공공의료 강화

1) 주요 내용

이재명 후보는 보건의료정책 분야에 있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및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
-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와 중증-응급 24 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
-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및 방문·재택 진료 확대
-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2) 시사점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 및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공약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민주당에서 종전까지 추진해왔던 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을 감안하여, '지역', '사관학교'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여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 방안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이후 지난 5년여 간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의 허용 범위, 의약품 불법유통 및 오남용 방지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민참여 의료개혁 추진

1) 주요 내용

이재명 후보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 강화 및 적정인력 확보를 통해 당면한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시사점 – 사회적 합의 과정과 정책 결정 속도의 균형성 확보가 과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의료전달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 등 주요 의제들에 대한 정책 결정이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비판적 인식하에, 의료계를 포함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의대 정원, 전공의 처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등에 대한 사항들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

1) 주요 내용

이재명 후보는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대상별·질환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장성을 확대함으로써 의료비 절감과 질병 예방을 도모하는 한편, 희귀·난치 질환 부담을 완화시키고,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2) 시사점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효율화 영향에 주목할 필요

현행 법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정부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 제1항 및 제2항, 국민건강증진법 부칙(2002. 1. 19.) 제2항], 실제 정부의 지원율은 현행 법령에서 정한 20%에 훨씬 못 미친 14%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공약에서 밝힌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공약을 통해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의료비 절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고지원 이외에도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민주당 산하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에서는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전략으로 제네릭(복제약) 및 의료기기에 대한 가격 규제 필요성까지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는 민주당의 2024년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관리 및 예방 체계 구축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활동, 학교 급식 개선, 신체활동 증진 등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

1.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1) 주요 내용

김문수 후보는 고령자·청소년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 어르신에 대한 폐렴구균 예방접종, 65세 이상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남성에 대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영유아에 대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도서 산간 지역 등의 어르신을 위한 방문 접종 및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2) 시사점 – 비용 효과성 검증 필요

종전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연령층, 성별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어느 질병의 예방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질병에 대한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회사나, 특정 질병을 주로 다루는 학회 입장에서는 관련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 시 비용효과성이 크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정부에 효과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의료 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 시스템 재구축

1) 주요 내용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6개월 내에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여 의대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2) 시사점 – 의료계 의견 우선 반영시 개혁 지연 가능성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이 의료계의 참여 없이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반성적 고려하에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대생, 현장 전문가 등의 참여 보장을 언급한 것에 비추어 보면,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있어서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임신, 육아, 어르신 돌봄 지원 강화

1) 주요 내용

김문수 후보는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고,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한편,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평가의무 공표제를 도입하고 모자 보건형 보건지소를 확대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나아가 김문수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등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2) 시사점 – 재원 마련 방안의 구체화 과정이 필수적

임신, 육아, 어르신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제네릭 등에 대한 가격 규제 등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 전문가



안효준
변호사
T 02.3404.6409
E hyojun.an@bkl.co.kr



백지욱
변호사
T 02.3404.0958
E jeewook.baek@bkl.co.kr



송영주
고문
T 02.3404.6595
E youngjoo.song@bkl.co.kr

VIII. 금융정책, 가상자산·블록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의 후보 등록을 하면서 공표한 주요 공약집과 경제정책관련 자료를 보면 전제적으로 전통적인 재정금융정책 주도에서 탈피하여 강력한 산업정책 주도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독자적인 금융산업으로 보기 보다는 강력한 산업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방점을 두고 있고, 금융생산자(금융기관) 보다는 일반주주·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바, 이재명 후보도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 활용 방안으로 여러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모험자본의 적극적 조성·공급과 일반주주 권익 보호 중심의 자본시장 육성

1) 딥테크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기능 강화

- 벤처투자 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 대 벤처강국 실현: 모태펀드 예산 및 벤처·스타트업 R&D 예산 대폭확대. CVC 활성화, M&A 촉진 등을 통한 벤처투자의 회수시장 활성화
- 바이오특화펀드 등 첨단테크 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활성화 지원

2)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

-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 환원 강화
- 외국인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통해 낮은 자본성숙도를 극복

3)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 먹튀·시세조종 근절로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

4) 시사점 - 벤처와 AI 등 첨단산업 분야 금융 지원 관련 상품 개발 관심 필요

대기업 중심의 금융에서 벤처 등 새로운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금융자원의 배분을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또한 최근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투자·벤처 투자 허용 등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민주당 정권의 모험자본 관련 정책은 큰 무리없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기존의 부동산 PF 등 전통적 금융자산이 첨단산업 지원 쪽으로 보다 많이 재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품 개발과 영업활동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소액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주주충실 의무 상법 개정, 지배주주 사익편취 근절 등)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관련 법령들이 바로 재도입·실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가계와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확대

1)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부담 완화

-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및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
- 디지털 전환 적극 추진 및 글로벌 소상공인 집중 육성
-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에 이르는 종합방안 마련

2) 가계 등 금융취약계층 부담 경감

- 중금리·중위험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허가하고 AI 와 빅데이터 기술 등 핀테크(FinTech) 기반으로 여신심사시스템을 고도화
-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세스 개선 및 서민 대상 간이 채무구조 프로그램 도입 검토 등)
-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 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 전가 방지 등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

3) 시사점 - 소비자 보호 관련 금융감독 강화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

서민 및 포용금융 정책은 민주당의 전통적 금융정책으로서 문재인 정권 때에도 추진되었던 사안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과거 금융생산자(금융기관) 보다는 금융소비자, 특히 서민·채무자 중심 정책노선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push 가

과거보다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가상자산 등 디지털금융의 활성화

1) 정책 기조 및 배경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정책을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으며, ①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추진, ②통합감시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 조성, ③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때,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 조성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가상자산 2 단계 입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출범한 디지털자산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미국의 핵심 정책 중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④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표방한 바 있습니다(5.8 일, '찐 리얼 경제 Talk, Talk 라이브' 인터뷰), ⑤ 복수거래소-복수은행 체제 허용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자금세탁방지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보류한 상태입니다.

2) 주요 정책 내용

①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추진

과거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므로, 새로운 정부는 국내에 가상자산 현물 ETF 를 도입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기초자산에 비트코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거나 금융위 유권해석의 변경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 조성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사항은 명확하지 않으나,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볼 때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거래소가 수행하고 있는 이상거래 상시감시를 법정 협회 등 공적 기관이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일부 규제 외에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촘촘한 규제를 마련하여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③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거래 수수료는 정부 또는 금융당국이 직접 결정하기 어렵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가격의 영역입니다. 다만, 새로운 정부로서는 현재 5 개로 제한되어 있는 원화마켓 거래소를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④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2017 년 이후 국내에서 가상자산 발행(ICO)은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고 발행규제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서는 발행규제가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2 단계 입법을 추진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공시와 해외에서 발행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시사점 - 확대될 사업영역에서 추가 동력을 포착할 기회

이재명 후보가 집권할 경우 추진하게 될 가상자산 정책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상품 출시를 허용함으로써 가상자산을 금융시장의 일부로 포섭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이기는 하나, 가상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진흥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젊은 유권자들의 자산 증식 니즈에 맞추어 가상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위험을 줄여주는 현실적인 측면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경우 직접적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상품 출시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은행 등 신탁업자 역시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을 영위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별도로 취득하지 않고 신탁업의 부수업무로서 이를 영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경우 은행이 자회사의 형태로 발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은 현재 운영중인 자사 플랫폼을 활용하여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및 핀테크 업체들도 블록체인과 그 보안성 확보 등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할 필요가 있고, 실제 가상자산 2 단계 법안에서 관련 규제가 마련되면 발행을 위해서는 발행인 인가, 유통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지급완결업(결제업과 유사한 서비스) 등의 인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와 부분적으로 궤를 같이하는 방향성이 관찰됩니다. 금융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지원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후보 본인이 원래 재야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서민 금융 지원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산층·청년 등의 재산형성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금융생산자(금융기관)에 대한 비판적 공약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재명 후보와는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블록체인과 관련해서도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의 일환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1.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 장기주식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
- 배당소득 분리과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납입한도 연 4 천만원, 비과세한도 1 천만원으로 확대
-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으로 공정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2. 서민·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서민금융기능 통합 추진
-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 구축
-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 및 신용평가체계 혁신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
-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에 캐시백 제공, 정부·카드사·지자체 연계 통합 소비 포인트 시스템 구축

3. 청년·신혼부부·아이 금융지원

- 청년·신혼부부 주거금융 지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주택구입), 버팀목대출(전세) 기간 연장,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 완화

- 우리아이 자산 형성 지원: 0~17 세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신설, 취약계층 아동의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4. 시사점 - 금융산업계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사업 환경 형성 예상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중산층 자산형성 등 이재명 후보와는 다소 결이 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상자산관련 공약, 소상공인 공약 등이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현재 민주당이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기는 하나 김문수 후보의 상당수 공약은 행정부 자체 권한행사로, 또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 실현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중산층 소득 형성 지원 공약 중 일부는 민주당과 상당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생산자(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금융정책이 대체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 커다란 변화 없이 안정적 정책 환경 하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전문가



노미은
변호사
T 02.3404.0656
E mieun.roh@bkl.co.kr



김호진
변호사
T 02.3404.0695
E hojin.kim@bkl.co.kr



김효봉
변호사
T 02.3404.0985
E hyobong.kim@bkl.co.kr

IX. 조세 및 재정정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1. 상속세제 개편

1)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수직 이동이 아닌 수평 이동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담세력이 약합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지만 배우자의 사별로 인한 상속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이견이 적고, 이재명 후보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한 바 있으므로, 대선 이후 입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2)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상향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인하여 과거 일부 고액자산가만 부담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상속세가 중산층으로 부담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중산층의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현실적인 수준의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임광현 의원(국세청 차장 출신)이 2024 년 8 월 발의한 상증세법 개정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선 이후 입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3) 유산취득세 논의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년간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민주당 및 이재명 후보는 유산취득세에는 동의하고 있지 않으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상속세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 상향이 추진될 경우 함께 논의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4) 가업상속 공제제도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공약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4 년에 민주당 소속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기업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에 한해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액의 한도를 없애는 '지방특화형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안'을 건의한 바 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가업상속 공제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중산층, 서민층을 위한 근로소득세 조세부담 경감

정부의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수년간 근로자의 명목소득이 증가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실질적인 증세로서 근로자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최근 민주당의 임광현 의원이 주최한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근로소득세 합리화의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i)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ii)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 확대(일정 한도의 사기업 복지포인트 등), (iii) 소득공제 대상 확대(출산 및 육아 관련 비용 등)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와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초등학생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 등이 공약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3. 산업지원 정책

이재명 후보는 제 1 호 공약으로 "경제 강국"을 내세우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 정부와 동일하게 국가적 지원이 요구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지원 분야는 소폭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AI, K-콘텐츠, K-방산 육성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최근 기업의 신규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 년 연장하면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만 적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하면, 산업지원 정책의 경우에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우대하려 할 것이 예상되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대기업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개선

우리나라 조세사건의 불복구조는 과세전 적부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행정소송 3 심제에 이르기까지 단계가 많고 절차가 중복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가 밀접하게 연계되지 않고 별개로 운영되어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고, 조세전문법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관의 세법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에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통합행정심판기관 설치, 조세전문법원 설치, 행정소송의 1 심 기능을 대신하는 통합조세심판소 설치 등이 고려될 수 있고,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25 년 4 월 주최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위와 같은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개선이 논의된 바 있어 주목됩니다.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의 조세관련 쟁송비용과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합니다.

5. 시사점 – 투자지원 및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개선 적극 활용

조세 제도와 관련하여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AI 등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추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개선 방안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기업측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여 추진에 탄력을 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

1. 상속세제 개편

1)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수직 이동이 아닌 수평 이동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과세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약합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지만 배우자의 사별로 인한 상속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이견이 적고, 김문수 후보도 '21 대 대통령 선거 10 대 공약'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포함하였으므로, 대선 이후 입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2) 유산취득세 개편

상속세제 중 현행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점에서 상속인들에게는 보다 합리적인 과세방식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납부 절차, 각종 공제액 범위 조정 등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많지만,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년간 유산취득세 개편을 준비하여 왔으므로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행정상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1 대 대통령 선거 10 대 공약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현재까지 유산취득세 개편에는 동의를 한 바 없으므로, 대선 이후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 개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20%의 할증평가가 적용되므로, 기업을 상속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상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경영자들이 경영권

상속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외국자본 등을 포함한 제 3 자에게 경영권을 양도하는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김문수 후보가 발표한 '21 대 대통령 선거 10 대 공약'에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대선 이후에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가 이루어지기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중산층을 위한 종합소득세 조세부담 경감

정부의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수년간 근로자의 명목소득이 증가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실질적인 증세로서 근로자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21 대 대통령 선거 10 대 공약'에서 중산층의 소득 및 자산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i)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 맞춰 자동 조정, (ii)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경로우대·장애인 공제 상향, (iii) 6 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를 자녀 수에 비례하여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중산층을 위한 종합소득세 조세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약은 대선 이후 여·야 합의를 거쳐 입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3. 부동산 세제 개편

우리나라는 최근 10 년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강화되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증가한 영향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의 일부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지만 이를 제외한 지방의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는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21 대 대통령 선거 10 대 공약'에서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제도 개편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i) 종합부동산세 개편, (ii)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iii)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의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전 정부에서 종합부동세 완화 등 조치를 취하였고, 부동산 세제 개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대선 이후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산업지원 정책

김문수 후보는 제 1 호 공약으로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우면서 (i) 법인세 세율 인하, (ii)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iii)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세제혜택으로 감소하는 세수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방안 등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세제 혜택이나 범위는 향후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별도로 이전 정부들과 동일하게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계속될 것이고, 이때 구체적인 지원 분야는 소폭 변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AI,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유철형
변호사
T 02.3404.0154
E cheolhyung.yu@bkl.co.kr



장성두
변호사
T 02.3404.6585
E sungdoo.jang@bkl.co.kr



박창수
변호사
T 02.3404.7659
E changsoo.park@bkl.co.kr

X. 국정 운영 (국회, 언론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으로 국회 개혁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없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시도하여 진전이 없더라도 국회 운영상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경우에는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을 법안이나 예산안 형식으로 제안하고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공약이 약속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신속하게 집행됨으로 인해 정책 집행의 신속성이나 효율성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론이나 방송 관련한 공약도 특별한 게 없지만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추진한 지상파 3 사 지배구조 관련한 법률 개정과 보도전문채널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한 법률 개정 추진 등이 그나마 주목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도 국회 관련하여서는 헌법 개정 관련한 공약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헌법 개정 관련

1) 계엄선포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선포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상계엄을 통하여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나 구속 등을 시도하거나 정치활동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헌법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비상계엄과 같은 상황이더라도 예외적으로 반헌법적 계엄포고령 위반 등의 경우에는 이를 위반한 국회의원이 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여 반헌법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는 헌법개정 사항입니다.

2)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청렴의 의무, 국가이익 우선 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하여 반헌법적 행위를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현행 5 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국민에 의한 심판의 기회를 보장해 주고, 단임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4 년으로 줄이는 대신 연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4) 총리 추천제 도입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현행 대통령 추천으로 국회동의를 받아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절차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국정운영의 차질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5) 시사점 –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물음표는 사라지기 어려움

대통령 4 년 연임제 도입과 총리 추천제 도입, 국민소환제 관련한 논의는 그 동안 꾸준히 있어 왔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계엄해제권 원활한 행사 관련한 사항은 이번 비상계엄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개헌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과 국민들의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헌 일정 관련하여 2028 년 총선 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제시했고,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대통령 중간 평가 관련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지적되었던 현행 헌법의 여러 제도적인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헌 의지가 계속 유지될지 여부는 대내외적인 환경, 정치적 상황, 국민들의 개헌 공감대 형성, 총선에서의 유·불리 등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성장과 통합 관련 공약으로 입법 및 예산 사항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와 분배를 강조했던 민주당의 기존 색채와는 다르게 이재명 후보는 성장을 제 1 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1) 입법 사항

반도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세금 감면이나 지원 관련한 사항. 방산수출 기업 R&D 투자세액 감면, 방산 병역특례 확대, 주가조작·시세조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재추진,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쪼개기 상장' 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등은 입법사항에 해당합니다.

2) 예산 관련 사항

반도체 RE 100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AI 투자 100 조원 시대 개막,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고성능 GPU 확보 (최소 5 만개) 추진, 방산 지원 정책, 금융 개편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은 예산 지원을 통하여 정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예산 관련한 공약입니다.

3) 시사점 - 실행에 대비한 진지한 준비가 요망됨

성장과 통합 관련하여 내세운 많은 공약사항들은 여야 간의 이견이 많지 않은 사안입니다. 특히 반도체 지원이나 AI 관련한 사안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야가 공통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여야 공통 공약 사안은 여야가 원하면 언제든지 법률로 성안되거나 예산으로 반영하여 그 성과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인하여 그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들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이들 공약들은 일사천리로 법률에 반영되거나 예산으로 편성되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장을 앞세운 것은 실용주의적 면모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렵고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위기 국면에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정치적인 이슈 보다는 경제살리기를 우선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3. 언론 개혁 관련 사항

1) 방송통신위원회 정파성 극복을 위한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법제 정비

현행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한 2 인, 국회 추천 3 인(여당소속 교섭단체 1 인, 야당소속 교섭단체 2 인), 총 5 인으로 구성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당측 인사가 3 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당에게 유리하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파성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인원 구성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주겠다고 하는 방안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2)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실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와 관련된 사항은 지상파 3 사(KBS, MBC, EBS)의 이사 구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사의 구성 인원을 늘리고, 구성원을 다양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추천 몫을 줄이는 대신 방송관련 학회나 직능 단체의 추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입니다.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관련하여서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과 편성규약 및 편성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여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보도전문채널 사장 임명에 있어서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명에 있어서 직원 과반수 동의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3) 시사점 - 일방 독주 방식 가능성은 낮으나 꾸준히 시도할 것으로 예상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공약은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여당측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상대에 대해 비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공약이 그 결실을 이룰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공약과 관련하여 공영방송의 이사의 수를 늘리고 구성원을 다양화하는 방안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정파에 유리하게 이사 구성이 될 것으로 염려하였기 때문에 그 결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영 보도전문채널 사장 임명과 보도국장 임명과 관련하여 "사장추천위원회" 추천 의무 도입과 보도국장 임명에 있어서 직원 과반수 동의제 도입은, 민간기업의 경영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기업의 자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 역시 국회 관련하여 대선 공약으로 특별하게 내세운 것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에서와 같은 극심한 대결 구도는 다소 완화될 것입니다. 이는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고, 이는 국민들이 현행과 같이 다수의 힘으로 입법부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했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게 공약으로 제시된 사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1 년 후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국회에서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이나 방송 관련한 공약은 10 대 공약에는 제안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했던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과 관련한 제도 보완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도 10 대 공약 중 국회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인 일부 헌법 개정 관련 공약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헌법 개정 관련

1)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2028년 4월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 실시

당선 시 대통령 임기를 3 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을 하면서, 그 후의 대통령은 4 년 중임으로 하여 중간평가제를 도입하여 책임정치를 강화하고, 내란 및 외환죄을 제외하고는 재임중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서는 불소추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등 대통령의 특권을 폐지하여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2)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국회 견제 방안 강구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청렴의 의무, 국가이익 우선 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탄국회를 개최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허용

헌법 제 97 조는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아니어서 감사원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므로 헌법을 개정하여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4) 시사점 - 개헌 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민주당과의 협의와 절충의 미학의 함수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3 년으로 단축하면서 그 후 대통령 임기를 4 년으로 하고 중임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관련하여 4 년 중임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제안은 아니지만, 대통령 임기를 3 년으로 단축하면서 2028 년 총선과 연계를 하는 방안은 대통령 소속 정당과 국회 다수당을 일치시켜 현재와 같은 극심한 대립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기 단축과 관련하여서는 민주당과의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4 년 중임제 또는 개헌으로 임기가 단축된 대통령에게 1 회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는 등 협상이 가능한 대안을 놓고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할 만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각 정당들이 선거 때마다 폐지를 약속했지만 결실로 이어지지는 않은 공약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국회의원 목에 방울을 다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이끌어 낼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련 불법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선거 관리가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와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은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2. 입법 및 예산 사항

1) 입법 사항

-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일자리 창출 기업 세금, 부담금 감면, 육아 부부 소득세 감세 폭 확대,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부부간 상속세 폐지, 유산취득세 도입 등 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와 기존 세제의 불합리한 점 시정
- 공수처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간첩죄 개정 등 보수 이념 실현
-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으로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과학 강국 구현
- 그 밖에도 중산층, 청년, 소상공인 보호, AI, 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 재난 예방 및 대응 방지 시스템 구축

2) 예산 사항

- AI 인재 육성, AI 유니콘 기업지원, AI 융합센터 구축 등 AI 관련한 투자 및 지원 확대
- 어르신 돌봄 강화, 가족 친화 생애 맞춤형 복지 구현,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청년 취업, 주거, 교육, 결혼, 양육 부담 완화로 청년을 위한 기회 창출
- GTX 로 연결되는 나라, 초광역 메가시티 추진
- 그 밖에도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서민경제 회복, 소상공인 금융지원확대 등 서민 민생 관련 대책

3) 시사점 - 민주당 공약과 중복되는 사항은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적극 대응 필요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세금이나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보수의 가치에 기반한 성장 중심의 기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스스로 자립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노인, 여성들에 대하여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약들은 민주당의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공통공약 사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한다고 하면 입법화가 이루어지거나 예산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의 문제는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입법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방송 및 언론 관련한 사항

방송 및 언론 관련하여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없지만, 공영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관련하여서는 방송에 종사하는 개개인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편향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볼 때, 이 문제는 결국 공영방송사 사장이나 이사 임명과 관련되어 있고, 그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몫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방송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전문가



최석림
변호사
T 02.3404.0654
E seokrim.choi@bkl.co.kr



김형욱
고문
T 02.3404.7350
E hyeongwoog.kim@bkl.co.kr



이동빈
전문위원
T 02.3404.0562
E dongbeen.lee@bkl.co.kr

XI. 경제부처 조직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 소폭의 정부조직 개편만을 단행했습니다. 이번에도 대선 직후 새 정부가 즉시 출범하게 되고,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대응이 시급한 만큼 민주당은 대대적인 정부 조직개편 보다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제부처 조직개편은 기업이 관련 규제 대응 등을 하기 위한 대정부 소통 채널 구축, 전략 등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기획재정부

1) "경제정책" 및 "재정" 기능 분리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제정책"과 "재정" 기능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를 2 개 부처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이 추진된다면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의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 체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할 것인지는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2) 예산권 상실과 함께 약화될 정책조정 기능 - 부처의 적극적 책임행정 보장이 관건

기획재정부는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정책, 예산, 세제, 국제금융, 대외경제, 국고 등 넓은 범위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처럼 2 개 부처로 분리된다면 과도한 권한집중 논란은 해소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기획재정부는 부총리 부처가 아닌 일반 부처로 격하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한 경제정책 조정, 규제 개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산심의권은 기획재정부의 정책 조정역량을 뒷받침했는데, 이를 상실한다면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의 정책 총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원격의료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스타트업 규제완화 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관계부처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규제를 개선할 동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각 부처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어 정책적 자율성이 제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던 정책조정 기능의 대부분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이 직접 수행해야 할 것이고, 중대 사안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할 경우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1) '산업', '통상' 및 '에너지' 기능 분리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면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통상" 기능 분리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미 관세협상 등 통상 이슈 대응이 매우 중요해진 만큼 통상 소관부처를 신설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통상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직개편 시 당장의 통상 이슈 대응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여 통상 기능 분리는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2) 국내 주력 제조업에는 부담스러운 결과를 안겨줄 수 있음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관한 부분은 VI. 에너지·환경 참조)

통상 기능은 외교부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산업부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습니다. 전자는 오늘날 경제외교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 후자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 있었을 때에는 한미 FTA 같은 중요한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으나, 통상 기능이 산업부에 있는 동안에는 국내 산업 보호 논리가 우선되어 통상 협상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통상" 기능이 분리되어 독립하거나 외교부로 이관되면 통상정책의 독자성, 객관성 및 적극성이 제고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다자통상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정책 변화에 민감한 자동차 등 국내 제조기업은 관련 동향을 보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3. 금융위원회

1) '정책' 및 '감독'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 업무를 소관하는데 '정책' 기능은 금융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 경향이 있는 반면, '감독' 기능은 규제를 엄격하게 집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충돌을 완화함과 동시에 각 기능이 더욱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및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살펴본 기획재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감독' 기능은 별도의 금융감독기구가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2) 전향적 정책에 따른 기회를 적극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되, 강화될 감독에 면밀하게 대비

'정책' 기능이 '감독' 기능과 분리될 경우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핀테크, 가상자산 등 산업분야는 그동안 필요로 했던 규제 완화, 제도 개선 등을 적극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반면, '감독' 기능도 보다 강화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점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

현재까지 기업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가칭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대통령실에 '기업민원 담당 수석'직을 두겠다는 내용 외에는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된 공약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안과 같이 기획재정부를 정책과 재정으로 분리하는 방안은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종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만든 것이 같은 당의 이명박 정부이므로 그 취지를 계승할 가능성이 크고 특별한 개편조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정부조직에 대해서도 그동안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별히 문제를 지적한 바가 없으므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은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정부조직의 부분적인 조정을 위한 추가적인 방향 제시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전문가



권소담
변호사
T 02.3404.7651
E sodam.kweon@bkl.co.kr



우병렬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 주)
T 02.3404.6990
E byongyol.woo@bkl.co.kr



경기동
변호사
T 02.3404.5852
E kidong.kyeong@bkl.co.kr

XII. 사법기관 개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검찰

1. 이재명 후보의 검찰개혁 방안 요지

1) '22년 대선' 및 '24년 총선' 공약 등

2022 년 실시된 제 20 대 대통령 선거 시에 민주당이 내건 검찰개혁 관련 공약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절차법 개정,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에 대한 통제장치 강화(재정신청 전담재판부 설치, 공소유지 전담변호사 도입, 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실질화), 공수처 안착을 위한 인적·물적 역량 보강 등이었고 2024 년 총선 시 민주당 공약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2)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 및 최근 발언

이재명 후보는 10 대 공약을 통해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며 검찰 개혁 완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각종 언론을 통해 위 공약 내용과 같은 취지의 검찰 개혁 방안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 유지·담당 기관은 분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공수처 검사를 늘리고,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을 강화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기소청·공소청·수사청으로 철저히 분리해 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뭉쳐있으면 남용되는 게 권력의 본성이다"(25. 4. 15. 유투브 채널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출연 시), "더 이상 기소하기 위한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25. 4. 25.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TV 토론회)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최근 발언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좀더 구체화하여 공소청, 수사청 등 그 기능에 맞는 별도 기관 구성, 공수처 강화, 경찰 국가수사본부 강화 등 수사 기관 신설, 강화를 강조한 점입니다.

3) 민주당 집권 시 추진 방향 전망

(ㄱ) 공소청, 수사청 분리 추진

민주당은 최근 일관된 논조로 수사권, 기소권 분리 방침을 천명했고 이재명 후보도 공소청, 수사청 분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정부 출범 시 이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 실행을 위한 각론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수사청을 설립할 경우 가칭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단일 청을 설립할 것인지, '금융범죄수사청', '마약범죄수사청' 등 분야별로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립할 것인지, 남아 있는 검찰청(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 수사지휘권을 인정할 것인지, 불기소결정권을 부여할 것인지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다양한 쟁점들이 있어 단시간 내 추진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ㄴ) 기타 법령개정 논의 등

검찰청 개혁 문제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입법적 방안이 강구된다면 사정기관 개혁 법안 논의와 맞물려 논의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개혁, 사법 리스크 해결을 넘어 광범위한 사법 개혁 논의가 추진될 경우 역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등 민주당 집권 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집중 논의해왔던 전례와 유사하게 관련 특별 기구 내지 논의체가 구성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시사점 - 수사기관 신설 등에 따른 '형사 리스크' 대응 강화 필요

검찰 개혁 관련 공약 중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여 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수사청을 별도로 신설할 경우 그 위상도 기존 검찰에 비해 낮아지고 수사대상 범위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독자적 수사권을 보유한 새로운 수사 기관이 탄생하는 것이므로 그 기관은 검찰 전문수사 역량의 승계, 위상 제고 등 차원에서 활발한 수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그간 정치 상황 등으로 보류되었던 각종 금융, 공정거래, 기업범죄, 중요경제범죄, 선거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수사 진행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 수사권에서 분리된 수사청 신설뿐만 아니라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그대로 추진될 경우 신설되는 수사청과의 수사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여전히 보유한 상황에서도 검찰,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결국 조율되지 않은 채 각 기관이 별도 수사를 벌인 사례에 비추어 보면, 위상이나 권한이 크게 다르지 않는 두 수사기관이 본격 경쟁을 벌일 경우 각종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현재 수사권을 지닌 검찰은 체포,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 수사를 위한 독자적 영장청구권 및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검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수사업무 충돌 상황이 발생하여도 경찰 영장에 대한 검토 과정 등을 통해 일부 조정 기능도 발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신설될 수사청이 영장 신청권만을 가진 경찰과 유사한 위상으로 정해진다면 동일한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양 기관 간의 경쟁적·중복적인 압수수색, 체포, 구속 영장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 후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수사기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간과하고 다시 수사하는 등 국민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공수처 강화도 추진되고 그 방향이 단순한 인적, 물적 보강 차원을 넘어 공수처 수사의 인적 범위 확대, 대상 범죄의 확대로까지 전개된다면 수사기관 간 관할 경쟁은 한층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해 12.3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벌인 수사권 경쟁이 단적인 예이며, 향후 각 기관의 관할 범위, 수사 대상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런 폐해에 대한 방지 장치를 반드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처벌 법규의 지속적 증가, 금융감독원 등 수사 전 사전 조사기관의 권한 강화, 고발기관의 증가(공정거래 사건에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권 신설 등) 등 전반적인 형사벌 강화 추세에 더해 수사기관의 신설, 기존 수사기관의 권한 강화 등 변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형사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

1. 이재명 후보의 경찰 개혁 방안

민주당 검찰·수사구조 개혁안(案)은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소청장을 차관급으로 격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을 상정했습니다. 이와 연동한 경찰청 개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경찰청 개혁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이재명 캠프의 전략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1) 검찰청 개혁 방향이 경찰청 조직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ㄱ) 검찰청 수사기능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위 개혁안에 의하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남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마약·대형참사 등 중대범죄수사를 전담하고 검사조직이 아닌 수사관 조직으로 신설됩니다.

(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강화

공수처는 현재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사 경찰고위직을 사건 관할로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대상을 모든 고위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 부여, 중앙지검의 보완수사요구권 폐지를 발의했습니다.

2) 문재인 정부의 수사구조 개혁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폐지, 사법경찰관의 사건 종결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수사구조개혁을 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검찰·수사구조 개혁안(案)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중수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검찰의 권한을 경찰청에 이양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검찰청의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수처로 나누는 것이 이번 사법개혁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검찰개혁이 경찰청 개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문재인 정부에서 완수하지 못한 경찰개혁 내용이 고도화되어 추진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ㄱ) 자치경찰제 확립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청 권한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을 운영하면서 집행력 있는 전국단위 행정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소극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민주당이 새로이 집권한다면 사법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를 고도화 액션플랜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을 준비 중입니다. 새로운 정부에 청장의 직급 상향을 조건으로 자치경찰제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ㄴ) 국가수사본부 역량강화

경찰청 권환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의 사건 지휘권으로부터 차단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경찰청장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독립된 인사권을 부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과 함께 감독관청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여 조직을 분리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ㄷ) 안보수사 역량강화

국가정보원의 안보수사기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된 후, 국가의 안보수사 역량이 후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정부는 안보수사 역량강화를 위해서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ㄹ) 민주당 10 대 공약집 정책순위 5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위 공약의 이행방법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 민생침해 금융범죄 처벌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그 밖에 사회적 재난에 효율적 대응, 교통사고 예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박근혜 정부의 4 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척결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면 TF 를 만들어서 흉악범죄, 교제폭력, 딥페이크 등 성범죄,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일제 단속을 추진할 것입니다.

2. 시사점 - '민생침해' 범죄에 경찰 수사력 집중할 듯

이재명 후보의 핵심 아젠다는 '성장' 정책입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역대정부와 마찬가지로 민생을 침해하는 보이스 피싱 사기, 전세사기, 리딩방을 통한 코인·증권 사기, 보험사기에는 경찰의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법원

이재명 후보는 제 21 대 대통령선거 10 대 공약에서 '사법 개혁 완수'를 천명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법관 정원 확대와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등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과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사법절차 공정성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 재판 관련 사법 및 사법 관련 행정의 변화

1) 대법관 증원, 구성의 다양성 확대, 대법원 기능의 변화

대법관 수를 현재 14 명에서 30 명으로 증원하고, 다양성 확대를 위해 대법관추천위원회 위원을 10 명에서 15 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반수를 넘지 않도록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 5.초, 위와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기존 특정 대학 출신의 남성 법관 위주의 대법관 구성을 탈피하여중 과반수 이상을 다양한 출신과 경력에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관 수가 두배 이상 증가하면 대법원의 기능 또한 법률심,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구체적 분쟁해결의 최종심 역할이 더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법관에 의해 독점된 사법기능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다소 주춤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고, 일부 민사사건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3)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의 도입

사실심리의 충실과 증거의 편재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소송절차가 시작되기 전 또는 직후에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 증거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는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연구를 진행하였고 법원 내외부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므로 조만간 도입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전문법원 설치 확대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공약집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노동, 해사, 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하는 각각의 전문법원 설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노동법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노동사건 심리에 법관이 아닌 노동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법원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 있는 법관이 배치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노동법원의 경우 법원 내외부에서 노동 관련 법령, 노동분쟁 사건을 경험한 인사가 보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판결서 공개 확대

사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서 공개를 현재보다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시사점 - 판례변경 증가와 '내부자료 제출' 압박 대비 필요

대법관이 증원되고 구성도 현재보다 더 다양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 판례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 외에 새로운 법리구성을 바탕으로 판례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급심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존 법리에 대한 이해는 물론 판례의 배경과 한계 등에 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를 하여 업무 및 소송에 대응할 것이 요구됩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면 현재와 같이 증거의 제출 과정에서 심리가 지연되는 현상이 해소되고, 소송 전 단계 또는 초기단계에서 충분한 증거확인이 이루어져 분쟁이 조기에 종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기업으로서는 더 이상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되고, 특히 제조물책임소송, 환경소송 등에서 내부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이용되어 남소를 당할 우려도 있으며, 디스커버리 절차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제도의 도입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살펴 업무문서의 생산과 보존 등 업무절차 전반에 걸쳐 이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

1. 사법 제도 관련 김문수 후보의 주요 정책 기조

김문수 후보는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를 내세우며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의 개혁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주요 골자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허용, ▲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이며,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정부, 지차체, 주요 공공기관에 파견하여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속칭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입니다. 이 중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사법방해죄 신설, 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사법방해죄 신설 공약은 정치권력을 악용한 수사 및 재판 방해 방지, 허위자료 제출, 증인출석 방해 등 수사 재판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형법에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2. 시사점 -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기존에도 사법방해죄 신설 법안이 제안되는 등 논의가 있어왔으나 형사법의 지나친 확장, 표현의 자유, 진술거부권 침해 우려 등 비판론도 강해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법방해죄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더라도 가벌성이 높은 행위는 기존의 다른 형벌규정으로 의율할 수 있으므로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은 보수정당의 기존 입장으로서 이번 대선에 다시 강조되었으나 현재의 국회에서는 의석 분포 상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법원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사법방해죄 신설 등과 같은 정책의 추진 방향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정치권력으로부터 수사기관과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관련 전문가



정수봉
변호사
T 02.3404.0199
E soobong.jung@bkl.co.kr



권오석
변호사
T 02.3404.6580
E ohseok.kwon@bkl.co.kr



장우성
변호사
T 02.3404.6460
E woosung.jang@bkl.co.kr

XIII. 국제 통상환경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1. 대미 관세 협상

1) 현 정부의 대미협상에 대한 비판

2025. 4. 2.(미국 현지시간) 미국 행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주도한 대미 협상에 대해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민주적 정당성 부족: 민주당은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주도한 협상이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일방적 퍼주기 협상 우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양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협상이 신중하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2025. 6. 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협상 동력이 크게 약한 상황에서, 그간 협상을 주도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모두 사퇴하여 교육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는 점에서, 현 정부 하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새 정부의 협상 방향

새 정부의 구체적인 대미 협상 방향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개별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5. 4. 3. 새 정부가 미국과 신속하게 협상할 필요가 있고,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나 다자간협정 활용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언주 최고위원은 2025. 4. 7. 기업 차원의 개별적 대응 보다는 국가 차원의 패키지 협상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미 실효관세율이 0.79%에 불과하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면서 가능한 모든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의 교섭에 많은 경험이 있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민주당의 통상안보 TF 단장으로서 향후 새 정부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김현종 전 본부장은 협상에서 상당히 강경하게 주도권을 가지려는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협상 경과에 따라서는 협상 타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현종 전 본부장이 최근 미국 백악관을 방문하여 미국 측 인사와 이미 교감을 나누었다는 점, 이재명 후보 측이 미국 측이 강조하는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최근 미측 관세 부과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한-미 간 관계가 크게 악화될 요인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2. 국제통상체제에 대한 입장

1) WTO 협정 이행

민주당 또는 이재명 후보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국제통상체제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직접 밝힌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산하 더미래연구소의 2025 년 핵심아젠다에서는 WTO 중심의 국제통상질서가 쇠퇴하였으므로 기존 WTO 체제하의 협상결과에 대해 맹목적 유지는 곤란하다면서, WTO 쌀의무도입물량 감축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현행 WTO 중심의 국제통상질서가 쇠퇴하였으므로 기존 협상결과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쌀의무도입물량 감축 협상 추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여전히 WTO 협상의 틀 내에서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 산업정책

지난 20 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변화 정책, 첨단산업의 집중 육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이재명 후보가 2025. 4. 11. "글로벌 경쟁에서 개별 기업이 기술투자와 연구개발, 인재양성 등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며 "정부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정부는 자유무역적 기조보다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정책을 보다 중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2025. 5. 12.자로 공식 발표한 공약집 역시 "튼튼한 경제 안보 구축"을 외교안보 분야 공약의 양대 축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이행방법으로서 '국익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제고 및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 체계 확립(국산둔갑 우회수출, 국가 핵심기술 유출 단속 강화,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한-미 FTA

2025. 2. 6. 개최된 민주당 집권플랜본부의 세미나에서 한 토론자(부본부장)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긍정적 효과가 과대평가되었다면서, 미국 넷플릭스가 한국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산업정책금융에 공백을 가져오게 된 원인을 한-미 FTA 로 언급하면서 한-미 FTA 를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토론자는 한-미 FTA 만으로는 AI 산업 상태계를 구축할 수 없다면서, AI 산업에 필수적인 반도체 통상에 대한 수출입 통제 규범 마련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미 FTA 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반도체 수출입 통제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새 정부 출범 시 이에 대해 취할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한 김현종 전 본부장이 민주당의 통상안보 TF 단장으로서 향후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민주당 측 인사의 발언이 실현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4) 한-일 FTA, 한-중-일 FTA 또는 CPTPP 가입 추진 가능성

이재명 후보는 2025. 5. 8. 경제 5 단체 간담회 당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언급한 일본과의 경제공동체 추진 방안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해관계가 비슷하다면서 긍정적으로 화답하였고, 이후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한일 관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그 일환으로 한-일 FTA 협상 또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CPTPP 의 개방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CPTPP 에 가입할 경우 일본과 양자 FTA 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시장을 개방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과거 협상이 진행된 바 있는 한-중-일 FTA 협상을 다시 개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보호주의 경향으로 인하여 수출대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활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는데, 경제대국이자 인접국인 일본과의 경제적 연대가 그러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경제계로부터 강한 요청도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모두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당사국이므로 어느 정도의 시장 개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으나, CPTPP 와 같이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일 FTA, 한-중-일 FTA 및 CPTPP 가입 또는 채택 논의는 RCEP 과 무관하게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한일관계 악화, 수산업계 반발 등으로 인하여 CPTPP 가입에 제동이 걸리고, 한-일 FTA 협상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후 이 문제에 어떤

입장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차기 정부의 실용지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주요 공약 중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정책의 이행방안으로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주요국과의 연대 강화", "국익과 실용의 기반 하에 주변 4 국과의 외교관계 발전"이 포함되어 있어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한편, 한-중-일 FTA 의 경우, 현행 한-중 FTA 의 개방 정도가 낮은 점, 중국 측이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개방 논의 진전에 미온적이라는 점,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긴장관계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대미관계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흐름이 완화될 움직임도 있는데 이 경우 불안정한 통상질서에 대응하고자 하는 한-중-일 FTA 의 추진 동력이 낮아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 상황에서 실제 한-중-일 FTA 가 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3. 통상조직 개편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거나 외교부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 기능을 외교부와 산업부 어디에 둘지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고, 과거에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그 가능성이 논의되거나 실제 조직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으므로 새로 들어서는 민주당 행정부가 결정하는 조직개편 방안이 실행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통상 기능이 외교 기능과 유사한 점이 상당하고 현재 외교부의 업무 일부가 통상교섭본부의 그것과 겹치는 측면이 있는 반면, 통상정책이 산업정책과 분리하기 어렵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통상조직이 어떻게 개편되는지에 따라 새 정부가 통상에 대해 가진 시각을 알 수 있고 통상정책의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조직 개편은 새 정부의 통상정책 기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가 국제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구상을 체계화하지는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 공식 발표된 공약집에서는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한다'는 내용만이 눈에 띌 뿐입니다.

경제 분야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밝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금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해 드릴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



최병일
고문
T 02.3404.0130
E byungil.choi@bkl.co.kr



한창완
변호사
T 02.3404.1076
E changwan.han@bkl.co.kr



김지이나
변호사
T 02.3404.0698
E jeena.kim@bkl.co.kr

bkl 법무법인(유한)태평양